

##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이 재 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이재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 I. 세종시의 설치 배경과 특수성

### 1. 세종시의 설치배경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국가정책 사업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에게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되, 기존의 수도권의 과밀현상 해소전략이 지방의 내성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의 물리적 규제에 역점을 뒀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간적 분산정책에 더하여 비공간적 분권정책을 동시에 활용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중심현상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요, 세종시이다.

#### 세종시 건설 추진과정

- 노무현 대통령 후보 행정수도 건설 공약(2002. 9.)
-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통과(2003.12.), 헌재 위헌결정(2004.1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2005.5.)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2005.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0.12.)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7.1.)

### 2. 세종시의 특성

이렇게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순수한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성 등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 우리나라 최초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세종시 뿐이다. 세종시와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자치시·군·구)를 두고 있지 않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광역사무를 담당하고 도 산하에 두고 있는 2개의 행정시에서 기초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시·군·구를 두지 않고 있는 세종시와는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층제 광역단체로서의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구분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대민서비스의 질 등 행정의 질적인 면에서의 저급화와 새로운 모델에 대한 행정인력 및 지방재정 교부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을 경우 지방재정자립기반 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

### 2)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앞서 밝혔듯이 세종시는 지난 2005. 10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3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이전을 완료하여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종사무소의 설치로 이어지는 등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거점도시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 3) 계획 성장도시의 특성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의해 탄생한 도시이고, 이미 대도시로 성장한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된 다른 도시와 달리 오는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과 그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의 특성은 2012.7월 세종시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6만 명의 인구 증가를 유인하는 효과와 함께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재정적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4) 편리한 교통 환경 등 지리적 특성

세종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13개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축에 위치하게 되고, 고속도로(5개노선)와 철도 및 인근에 당진평택항과 청주국제공항이 소재하는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 II. 세종시의 현황 및 여건과 발전방향

### 1. 세종시의 현황

세종시의 면적은 465km<sup>2</sup>이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4분의 3 정도가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신도시지역의 경우 73km<sup>2</sup>로 경기도 과천시의 약 2배 정도가 된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3행정동(14개 법정동)이고, 행정조직은 1실 5국 1본부이며, 보건소와 농업센터 2개의 직속기관과 2개의 사업소를 두고 공무원은 총 1,506명(일반행정 1,324명 / 소방직 182명)으로 출범 전 대비 903명이 증가됐다.

인구는 2015.1월말 현재 163,716명으로 세종시 출범 전(107,460명)에 비해 약 56,256명(52.4%)이 증가한 것이고, 지난 2014.12월말 인구(158,844명)보다 4,87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2014년) 7월 이후 신도시지역의 아파트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달 4~5천 명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종시의 재정규모는 9,676억 원(일반회계 6,950억 원 / 특별회계 2,220억 원 / 기금 506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7,900억 원) 대비 22.5%가 증액됐으며, 세종시정 2기 100대 과제 이행, 정부의 복지확대, 시청사 이전 및 공공시설물 인수·운영비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됐다. 특히 금년도 재정규모는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 예산(3,700억 원) 대비 161.5%(5,976 억원) 증가된 것이며, 여기에 신도시지역에 투입되는 건설청 예산(5,013억 원)을 더하면 총 1조4천7백억 원 정도로 급성장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체는 6,600여 개로 세종시 출범 전보다 27%(1,400여개), 의료기관(149개)과 학교수(81개)도 각각 73%(63개)와 42%(24개) 증가됐다.

## 2. 여건과 발전방향

세종시는 2014년 말까지 2005.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과 2005.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이후 그동안 10년 가까이 준비 끝에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어 16,000여 공직자와 연구원들이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됐다.

이는 당초 중앙행정기능과 첨단지식기반기능, 의료·복합기능, 대학·연구기능, 도시행정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등 6대 복합기능 중에서 이제 중앙행정기능만이 완료된 것이다. 또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정치기능은 서울에 남게 되어 국회 업무와 국정수행을 위해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초기부터 우려했던 국정비효율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4.10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3분의 2가 위치해 있는 세종시가 국정효율 증대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구역이 1읍 9면 3개 행정동(14개법정동)으로 이루어져 3개 행정동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신도시지역으로 세계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나, 과거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에서 흡수된 1읍 9개 면지역은 8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성장이 멈추어선 침체지역으로써 신도시지역과의 불균형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세종시가 그 내부의 불균형발전이라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세종시 신도시개발이 본궤도를 찾기 시작하면서 대전, 청주, 공주 등 인근지역의 인구가 크게 유입되고, 세종시 내부에 시설된 병원, 대형마트, 문화와 체육, 학원, 휴식 공간 등 정주환경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와 수도권에서 이전한 16,000여명의 중앙행정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끌어올리

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많이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 Ⅲ. 세종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 1.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정립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목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었고, 2004.10월 현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이전계획은 현재의 위헌결정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행정수도에 가깝게 이전하도록 수립됨에 따라 과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국정의 비효율과 국정단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해 왔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위헌결정 범위 안에서 시정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대면보고나 대면회의에 의한 국정과 국회운영방식을 IT기술을 활용해 화상회의로 전환하고, 국회출석도 각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하도록 해 각 중앙부처의 국·과장이 국회업무로 인한 출장을 줄이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국회도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위헌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라도 우리 세종시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분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최근 들어 대통령께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이 많은 데,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시 대통령께서 수시로 세종시에서 2~3일 간 머물면서 국가적인 일들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와 최근의 의정부 도시생활주택 화재 등에서 보듯이 현대생활에서 일

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는 구조적으로 대형화되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설치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문제가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에서 정한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이전고시 등 법적 절차가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2014년도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정부세종청사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또한 중앙부처 간의 협업에 의한 업무효율과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세종시 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세종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다행히 올해는 국가적인 규모의 선거가 없는 해인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우리 세종시가 보다 많은 국가적 행사와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오는 10월 한글날 행사와 지방자치박람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제2회 세계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유치해 준비에 들어갔다.

## 2. 도농이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상징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지역과는 달리 기존 읍면지역은 아무런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어 양 지역 간 생활격차 등 지역 내 불균형과 주민 간 갈등 해소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우리 세종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과 북부권은 경제중심축으로, 신도시지역 중심의 남부권은 행정중

심축으로 하여 이를 쌍두마차로 삼아 세종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부권 행정중심축은 당초 설계했던 밑그림의 원안을 토대로 최근 변화한 현실을 적용시켜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은 산업단지(미래, 첨단) 조성, 창조마을 시범사업, 과학벨트 등과 연계한 경제중심축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추진하여 80년 넘은 낡은 도시 조치원을 오는 2025년도까지 인구 10만 명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조치원 동서횡단도로와 세종시 제2청사 건립 등 2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신시가지 조성 및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펼쳐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넘어 조치원읍을 세종시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적 접근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역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세종형 로컬푸드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으로는 직매장 설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세종시는 정부의 역점시책인 창조경제를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시행하기 위해 농업과 ICT가 융합된 창조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SK의 ICT와 에너지 부문의 역량을 결합해 농촌지역에 적합한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스마트 팜 ▲지능형 영상보안 ▲스마트 로컬푸드 ▲스마트 러닝 ▲새로운 모습의 에너지 타운 조성 ▲영농기술 테스트 베드 제공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사업과 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도모하고, IoT기술\*(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을 활용한 원격 재배 관리 및 지능형 영상보안으로 농업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전망이다. 앞으로 세종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IoT기술은 모든 사물이 인간의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시 없이 협력적으로 네트워킹, 정보처리, 센싱을 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



이와 관련해 우리 세종시에서는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하여 균형발전국을 신설했고, 균형발전국 안에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를 두고, 앞으로 세종시 균형발전의 심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3. 제2수도권을 지향하는 충청권 상생발전

세종시의 신도시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은 당초 개발계획부터 레저와 관광 등의 기능과 생산시설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능을 인근 대전과 청주 등의 대도시와 상생 발전하도록 계획된 도시였다.

따라서 당분간 세종시가 인구와 경제 등 주변 지역의 주요 기능을 흡수하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종과 인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대전과 청주, 공주와 천안 등 충청권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발전의 새로운 중앙핵심권(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하여 광역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세종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종권역과 대전권역 등 광역권도시계획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종시와 인근지역의 상생발전 과제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으로 설치된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의 법적사무이므로 세종시지원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이 상호 협력해 개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권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내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세종시 제안사업 ]

사 업 명	선 택 사 유	시 도 의 견
1. 세종시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확보	▶세종시 중심의 국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 및 정부측에 지속건의 등 충청권의 공동노력 필요
2.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 청주~세종~대전 간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 충청선(조치원~보령) 철도 신설 ·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충청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충청권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광역환승체계 구축 검토 ※ 세종시 여건상 단계적인 환승체계 구축(BRT 우선 구축→시내버스 확대) ·(사유) 관내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중부내륙 물류환경개선, 충청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철도망 구축시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등 제약이 수반 됨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계획 반영을 위한 충청권 협조가 필요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 세종시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배후 지원할 대학연구기능 단지(4생활권)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과 사업화를 위한 SB(Science-Biz)플라자 건립 등을 통해 산·학·연 인프라유입과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4. 모범적인 신자치모델 구현

세종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층제(광역+읍면동)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로 본청업무 과부하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형 신자치 모델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층제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점) 행정을 시도와 시군구로 나눠 수행하는 타 자치단체보다 빠른 민원 처리 등 행정효율성과 높은 대응성, 시민에게는 비용절감,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가능</li> <li>● (단점) 새로운 자치모델에 대한 인력산정, 읍면동 기능조정 사례가 없어 인력확보 및 초기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 초래 ⇒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참여, 자치혁신기획단 운영, 새로운 모델개발 및 제도화 건의 추진 중)</li> </ul>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해 9월 세종시 자치혁신단(위원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자치 모델 관련 내부T/F팀을 구성하고, 2014.12월 신자치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혁신단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세종시형 자치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근린자치를 위한 당면과제, 권역·지역별 통합 읍면동의 필요성과 본청업무의 이양, 신 채용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특히, 세종시가 구상하는 통합 읍면동제도는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책임 읍면동제 및 대동제 실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금년 상반기 중 시청이 예정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북부권(조치원·연서·전의·전동·소정)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일환으로 세종시형 책임 읍면동제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별 위임사무의 적정성과 인력 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 IV. 세종시의 미래상

이러한 우리 세종시의 2015년도 발전비전에 맞게 시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목표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목표로 하였던 국토 불균형 해소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족 기능을 갖춘 인구 80만 명의 문화, 안전, 교육 등을 통한 사람이 먼저인 살기 좋은 세계명품도시가 멀지 않아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는 행정수도를 옮겨 성공한 도시다. 푸트라자야도 행정수도로서 정착하기 전까지 많은 논란과 과제가 있었다. 푸트라자야는 착공 14년만인 2010년도에 완성된 행정수도로서 지금은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고 있다.

우리 세종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푸트라자야처럼 세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전과 충남, 충북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본격적인 세종시대의 막이 올랐다. 세종시의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염원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우뚝 서 5천만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미래의 모습은 머서(Mercer)\*가 뽑은 세계 주요도시 삶의 질 평가 1위, 살기좋은 도시 1위, 세계적인 자방자치의 모범사례의 도시가 될 것이다.

\* 머서(Mercer) : 글로벌 인적자원 및 재정서비스 컨설팅 전문회사, 매년 220여 개 세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 10개 분야 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